

대화모임

한국 개신교와 민주주의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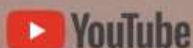
반성과 성찰로 나아감

2022년 12월 5일(월)

오후 2시 ~ 5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www.youtube.com/giyunsil

기윤실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



발제

백종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논찬

양승훈 경남대 교수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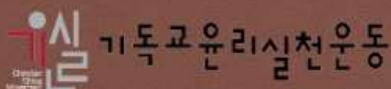
대화사회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문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간사 cemk@hanmail.net

크리스찬아카데미 최고권 연구원 tagung@daemuna.or.kr



크리스찬아카데미

알리는 말씀

- 발언을 하실 때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면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행사 종료 후에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순서 및 목차

여는 순서 - 양 단체 대표 인사말	(14:00~14:10)
<u>발제1 : 한국개신교와 민주주의</u> <u>백종국</u>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기윤실 이사장	(14:10~14:35)
<u>발제2 : 한국 민주화의 발전과제</u> <u>이삼열</u>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14:35~15:00)
<u>논찬1</u> <u>양승훈</u>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15:00~15:15)
<u>논찬2</u> <u>조성실</u> 시사평론가,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15:15~15:30)
휴식	(15:30~15:45)
<u>전체토론</u>	(15:45~17:00)
<u>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사회자, 발제자)</u>	(17:00~17:25)

[발제1]

한국개신교와 민주주의

백종국(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기윤실 이사장)

1. 한국개신교의 위기

최근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적 팽창과 정체성의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사회발전에 뒤처지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고등종교 중에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고, 세상의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¹⁾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재난을 겪으면서 한국개신교의 주변화와 게토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전광훈 사태로 대변되는 극우정치활동, 복음을 대체하는 세속적 이데올로기의 침투, 빛나간 세대주의 종말론과 오도된 선교활동, 신앙으로 포장된 탐욕과 목회세습, 등이 “한국 교회의 민낯”으로 드러났다.²⁾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70%가 한국개신교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으며 63.3%가 개신교의 인상이 더 나빠졌다고 답변했다.³⁾ 이와 같은 맥락으로 6개 장로교단에서는 지난 2년 동안 55만명의 신자들이 감소했다. 하루에 대략 747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었다.⁴⁾

한국개신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의 등불로 여김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자로 성경을 번역한 거의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이후로 반봉건·반외세운동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⁵⁾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 예술 등 제반 분야에서 서구의 근대적 체계를 도입하는 주체였다. 분단과 전쟁, 독재 그리고 내부 투쟁의 와중에서도 전반적으로는 민주화와 인권보호, 한반도평화정착,

1) 손봉호,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서울: CUP, 2017), 106.

2) 신하영 외,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 (서울: 기윤실, 2021).

3) <https://mch.nocutnews.co.kr/news/5405800>. 2022.8.2. 검색.

4)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11>. 2022.9.22. 검색.

5)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국제화를 이끌어나간 선구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등불을 끄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

한때 해당 공동체 발전의 견인차였던 종교가 점차 타락하여 공동체 발전의 걸림돌이 된 사례들을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역사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저지른 오류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의 개신교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개신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한국 개신교 내의 이념 갈등 문제를 다룬 장성민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⁷⁾ 낙관적 전망은 교회 내의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비관적 전망은 그저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은 없다. 비관적 전망의 종말은 강대강 대치에서 내부결속을 위해 외국과의 전쟁을 선택한다는 예언이다. 매우 비극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낙관적 전망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제 그 가능성을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따져보기로 하자.

2. 한국개신교와 매개의 변증법

사전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특정한 정치체제에 대한 총칭이다. 최소정의적 관점으로 볼 때,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주기적 선거, 법치주의의 확립, 삼권분립의 운영, 정당 간의 합법적 경쟁 등이 있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⁸⁾

대한민국은 이식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이전의 체제는 봉건적 왕정이나 제국주의 식민정 혹은 미군정뿐이었다. 남한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미국 체제를 복사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다.⁹⁾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통한 보통선거권의 도입을 미국(1920), 영국(1928), 프랑스(1946), 이탈리아(1946), 벨기에(1948),

6) 2004년 10월의 KBS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한국 기독교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사에서 53.9%가 현재 한국 기독교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종국,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10), 219.

7) (신하영 외, 2021), 80-81.

8)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2), 6.

9) 물론 상해임시정부가 혁명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에 불과했다.

스위스(1971)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급격한 이식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¹⁰⁾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실제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이념들도 대부분 수입된 이념들이었다.¹¹⁾ 보수나 진보, 좌파나 우파 등의 전형적인 이념 분류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수입 개념으로 적실성이 없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 정치 행위를 기존의 이념형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²⁾ 수입 이념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경쟁 속에서 개론화, 급진화, 기회주의화, 탈맥락화의 부작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 한국 정치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친미반공주의(親美反共主義)”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 분단과 전쟁, 경제 성장과 국제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된 극단적 실용주의의 또 다른 명칭이다. 치밀한 정당화의 보완없이 정치 투쟁의 구호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허위의식이다.

한국 사회의 실용주의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개신교도 분단과 전쟁, 독재, 산업화의 와중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미군정에 협력하여 개신교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승만의 선거운동에 앞장섰다.¹³⁾ 군사독재 하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진행된 부흥운동은 민중들에게 사회경제적 욕망의 실현 약속으로 고통스런 현실을 견디게 하는 심리적 동원 역할임을 자임하였다.¹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매개로서의 교회를 위한 실용주의적 몰입이 도리어 자기 소멸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었다.¹⁵⁾ 1980년대 말에 출범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역사회선교(逆社會宣敎)” 혹은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노태우정권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1989년에 한국기독교협의회(KNCC)의 사회선교(社會宣敎) 방침에 반발하여 소위 보수

10) (최장집 2002), 59.

11) 백종국, “수입학문의 토착화 딜레마와 해결방안.” 『한국정치학회보』 50집 1호 (봄 2016): 5-21.

12) 김세균 편, 『한국정치의 보수와 진보』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5).

13) 미군의 적산처리 과정에서 한국개신교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김근주 외, 『복음과 정치』 (대전: 대장간, 2016), 89.

14) 류대영, 『한 권으로 읽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15) 매개의 변증법에 대해서는, 백종국. “매개의 변증법과 국가의 흥망”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봄 2003) : 431-449을 참조.

교파들이 따로 만든 조직이다. 정치참여보다 복음전파가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후로 사학법 개정 규탄, 북한 퍼주기 규탄, 저작권 환수 반대, 보안법 개정 반대, 노무현 탄핵 찬성, 차별금지법 반대, 박근혜 탄핵 반대, 등의 노골적인 정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¹⁶⁾ 복음이라는 본질보다 매개자인 교회 조직의 성장과 강화에 몰두함으로써 도리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마침내 매개자인 교회의 몰락을 초래하는 모순에 처하고 있다.¹⁷⁾

3. 한국개신교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한국개신교의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주요 종교 중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자처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덩컨 홀은 그의 유명한 “민주주의의 딜레마” 논문에서 “민주주의는 빈번한 자살지향의 고질적 습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탄한 바 있다.¹⁸⁾

민주 체제가 생존하려면 먼저 외적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체제를 거부하는 내부 반란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보통선거를 도입한다 해도 당분간은 구조적이고 고질적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출애굽을 하던 히브리 백성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다수 유권자들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재정치를 그리워하는 대중들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민주주의 체제를 끝장내도록 허용해야할까? 합리적 선택이론은 민주 체제에서는 빈번히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정치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¹⁹⁾ 민주주의란 정성드려 가꾸지 않으면 쉽게 시드는 연약한 꽃과 같다.

16) 2003년과 2007년 사이 언론에 언급된 한기총 활동을 보면 1,095회인데 그중 73.5%가 정치사회 활동이었다. 특히 정치 분야 590건 중 대정부 비판이 69.8%였다. (백종국, 2010), 215.
17) 한국갤럽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개신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는 6%로 나타났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2.11.21. 검색
18) H. Duncan Hall, "The Dilemma of Democr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18 (Nov. 1941), 162.
19) 구현우, “기득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9월 2021): 373-410.

한국개신교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니 갑자기 강렬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보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계속 정교분리를 유지하든지 정치적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 한국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는 마치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자칫하면 수영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미국 개신교 우파와 밀접한 교류가 있으며 한국 내에서 민주주의 정착에 극히 유해한 ‘혐오정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⁰⁾ 이로써 개신교의 교인 감소, 젊은 세대의 이탈, 무종교인구의 증가 등의 종교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 한국개신교의 대표성 문제

한국개신교의 보수적 행동주의는 도대체 누가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느냐는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개신교인들의 정치의식 분포는 한국사회의 정치의식분포 처럼 거의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다.²¹⁾ 자신의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보수가 21.4% (일반인 17.5%), 중도가 46.6% (일반인 53.0%), 진보가 32.0% (29.5%)로 응답하고 있다. 난민 문제 있어서 이슬람 등 불온한 문화 전파 우려로 임시 보호도 안된다는 의견은 23.0% (일반인 18.1%)이며, “5·18 왜곡 금지법”에 대한 찬성은 62.4% (일반인 61.9%)에 달하고 있다. 전광훈의 언행에 대해서는 86.6%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적극 지지는 3.3%에 불과했다. 기독교인의 태극기부대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에는 7.5%만이 긍정적이었는데 대구·경북지역과 60대 이상 그리고 목회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위의 조사로 보면 기독교인 일반의 정치의식과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구들의 정치적 행동주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개신교 교단의 비민주적 대표권 구조가 이러한 괴리를 낳고 있다. 당회-노회-총회-연합회로 대변되는 대표권 구조는 계층을 따라 올라가면서 점점 더 노쇠하고 정치적인 남자 목사들로 점유되고 있다.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 연합단체들은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 가장 노쇠하고 보

20) 강인철, “한국 개신교와 보수적 시민운동: 개신교 우파의 극우·혐오정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집 (6월 2020): 4-30; 윤신일, 오세일,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5집 1호 (2021): 39-88.

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자료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수적이고 정치적인 남자 목사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개신교의 대표권에서 여성과 청년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또래 집단(*peer group*) 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정치적 편견이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²²⁾

목회자 그룹의 정치의식은 여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적이다. 위의 조사에서는 “예수님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대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답변이 38.4% (일반인 63.7%),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27.0% (일반인 16.2%),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가 26.2% (일반인 12.5%)였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는 8.4% (일반인 7.7%)만이 동의하였는데 목회자 중에서는 21.4%가 이에 동의했다. 스토틀가 정리한 바 동성애자가 동성애 관계를 고집하면 교회가 징계를 내려야 하겠지만 이조차도 혐오가 아니라 인애와 겸손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에게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야 한다.²³⁾ 21.4%의 목회자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조차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개신교의 민주화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민주정치에서 교회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한국개신교인의 정치의식이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다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매우 자연스럽다.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 이러한 의식구조를 민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는 점이다. 작금에 중대형교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목회세습 사건을 보면 한국개신교에서 목사의 사제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제주의화의 주요 명분은 해당 교회의 안정적 성장이지만 이미 지적인 대로 자기소멸의 변증법적 함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목사는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서 교회나 목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이다. 니이버가 말한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불의에 이끌리는 인간의 품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²⁴⁾

22) 2019년 소위 “조국 사태” 때에 전국 각지의 목사들이 모여 격렬한 정부규탄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에서 시작하여 조국 임명 반대, 주사파 성토, 자본주의 옹호, 종북 규탄,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7>. 2022.8.1. 검색

23) 존 스토틀 저/정옥배 옮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547.

5.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기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대표성도 없지만 한국개신교의 대표를 자임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극우적 행동주의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처방은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세교회가 세속 권력과의 야합으로 이지러졌을 때에 종교개혁이라는 처방으로 복음이 회복되었던 역사와 유사하다.

부당한 대표성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극복할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비관적인 견해이다. 한국개신교는 태생적으로 극우 파시즘적 반공주의를 지향했고 시대적 변화로 권력 박탈의 가능성이 보이자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돌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²⁵⁾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며 차분하게 박근혜의 탄핵을 이룩한 촛불혁명으로 인해 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주의 우상숭배와 맹목적인 반공주의를 걷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주장이다.²⁶⁾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이 두 견해 중 실현될 가능성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올바른 영성이 일깨워져야 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에 목을 매는 허위의식 즉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영원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역사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공중에 권세잡은 사탄이 조종하는 지상의 모략과 폭력과 억압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최종 결과조차도 그분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로써 복음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은 온전한 영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한국개신교가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구원을 윤리와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의인됨(*justification*)을 무죄선언됨(*acquittal*)으로만 가르치고 있다.²⁷⁾ 의로운 실천의 긴장을 벗어나

24)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4), xiii.

25) 박종균, "시민사회의 적, 극우 개신교의 레드-포비아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일고," 『기독교사회윤리』 49집 (2021): 39-72.

26) 이병주,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대전: 대장간, 2017).

2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7).

고자 하는 반쪽 복음은 복음을 세속적 욕망의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사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교리를 악용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보다는 혐오와 거짓과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도록 집요하게 공략하는 중이다. 또래 집단을 통한 고립의 협박과 정치적 동원을 통한 대중적 압력, 그리고 재정적인 회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흔들기 위해 사탄이 흔히 사용하는 수단들이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은 한국인들이 한국개신교에서 보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개신교는 어느 종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앞서왔다.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여 한국개신교는 한국 사회가 교회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개신교의 사회봉사가 개신교 확장을 위한 전도의 수단임을 잘 알고 있다. 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공짜 홍보 물품을 주는 듯한 사회봉사를 지양해야 한다. 합동교단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일반인에게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과제를 묻자 60.6%가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이라고 답했다.²⁸⁾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와 봉사“, 인권과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운동, ”정부와의 소통“, ”사회통합“ 등이 순서를 잇고 있었다.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난 목회자들의 다양한 탈선을 보면서 남을 돕기 전에 먼저 개신교 자신을 돕는 게 좋겠다는 통렬한 비판이며 하늘의 소리이기도 하다.

6. 한국개신교의 민주시민교육

우리가 지금까지의 오류를 청산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시대에 알맞은 정치적 해결책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성경 안에 모든 것에 대한 원리가 다 담겨있지만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정통하리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라면 목회자가 거기에서 가장 개명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인 사회에서라면 목회자는 불가피하게 성도들과 복음적 분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²⁹⁾

28) <https://mch.nocutnews.co.kr/news/5405800>. 2022.8.2. 검색.

29) 장신근, “교회의 민주시민교육-공교회와 공적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21집 (6월 2009): 109-152.

민주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 체제의 성격과 자신의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와 괴리에 대해 연구해보아야 한다. 체제에 내재된 기본 가치와 각종 제도, 행태와 의식, 사회구조의 특징, 과거사에 대한 인식, 국제체제의 이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보다 신빙성있는 진실을 얻으려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과 지성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크리스찬아카데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같은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아직도 유아기에 들어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정착시키는 역할이다. 종교적 신앙과 사회적 지성이 잘 어울려진 시민계층이야말로 어떤 혐오와 거짓의 캠페인에도 넘어가지 않는 민주주의의 인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개신교의 신앙이 온전한 복음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개신교가 지금처럼 위기에 빠진 이유는 강렬한 신앙적 열정을 오도하는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선전과 이데올로기를 신앙적 수사를 엮어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는 불상사가 초래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잘 정착하려면 신앙과 지성을 연결하는 거시이론의 제시와 함께 미시적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큰 뼈대와 함께 세부 내용도 동시에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쉽게도 그 건축은 부실 공사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의 발자취를 압축하는 후발주자효과(*late-comer effect*)를 누릴 수 있다. 서구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재정비된 미시적 내용을 우리 처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3대 정치적 교양”을 예로 들 수 있다.³⁰⁾ ‘무죄추정의 원칙’, ‘이익의 충돌’, ‘차선의 선택’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상에 구현하려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추천할만한 민주시민의 교양이다.

교회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제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각종 직분의 임기제, 각종 의결기구의 민주화, 재정의 투명성 보장 등은 교회 정관의 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실천해 볼 수 있다. 물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아를 죽이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도 가끔씩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무지로 큰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적 보완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30) 백종국, 『민주시민의 교양』 (서울: 예영, 1999), 73-105.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모자란 지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에 큰 공헌한 사례가 있다. 1990년대의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거위)〉 활동을 들 수 있다.³¹⁾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공명선거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정치 운동에 참여하였다. 1992년의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출범한 공선거위는 35개의 교단과 기독교단체들 참여하여 3천 권의 설교 자료집, 25만 매의 공명선거 스티커, 20만 매의 ‘공명선거채점표’, 2천 부의 홍보포스터를 배포했다. 이후 공선거위는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시민협의회(공선험)〉 결성을 주도하여 1995년 지방선거, 1996년 총선, 1997년 대선, 1998년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활동의 감시와 정책선거 홍보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활동은 1994년의 공직선거법 제정과 1997년의 평화로운 정권교체 등 한국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7. 결론

개신교의 한국 전래로 형성된 한국개신교는 당시에 민주주의의 제안자이며 지원자였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과 독재를 겪으면서 한국개신교는 점차 교회 조직의 성장을 추구하는 극단적 실용주의에 빠졌다. 민주화 투쟁을 거쳐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자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극우적 행동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문제는 교회라는 매개자를 위한 이들의 행동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로서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비극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로서는 아직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불상사이다.

이 글은 먼저 극우적 행동주의에 매몰되어있는 이들 소수의 정치 목사들이 한국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안으로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였고, 이를 위해 교회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열거하였다. 복음과 지성이 함께 봉사하려면 거시적 이론과 함께 미시적 내용의 개발이 필요함도 역설하였다. 제도화는 이러한 노력을 돕는 중요한 전략이다. 크리스찬아카데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같은 기독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리라 믿는다.

3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32년사, 1987-2019』 (서울: 기윤실, 2022), 156-162.

[발제2]

한국 민주화의 발전과제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민주주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긴 역사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은 비교적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심화하며 공고화하는 토대를 이룬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87년까지의 40년 동안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고, 시련과 굴곡을 겪으며 자라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에서 해방된 후 민주 공화국을 세우려는 의지와 목표는 있었지만, 오랜 봉건주의 시대의 낙후성과 군국주의 일제시대 의 잔재가 그대로 있는 풍토에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미소 양대 진영에 의한 분단과 1950년 한국 전쟁을 동시에 겪으며 남북 양쪽의 독재와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싹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부정부패와 관권, 고무신, 부정선거로 물든 50년대의 이승만 독재와 타락한 한국 정치를 비웃으면서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는데 이 말이 한국 민주주의를 비웃는 자조적 경구로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많이 회자 되었다.

해방 후 1950년대의 기독교는 북한에서의 핍박과 반공의식 때문에 남한의 민주체제를 적극 지지했고,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나 부정부패, 심지어 3선 개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독교 정치가라고 절대 옹호했다. 4.19 학생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졌지만 교회는 잠잠했고 자기비판이나 반성도 없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적 정부를 무너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섰지만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을 기독교는 비판하지 못했고 수용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월남 파병을 적극 지지했고 경제개발을 빌미로 자행된 탄압과 노동자 농민의 착취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한국 기독교가 박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운동을 하게 된 것은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고 보인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종신 독재 체제를 강행했을 때, 김재준 목사,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등 양심적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주수호와 회복을 위한 투쟁전선에 압장 서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고, 교수와 지식인들이 잡혀가 고문당하고, 조선, 동아 기자들 수백 명이 해직되었던 74-5년경에 종로 5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인권센터는 구속자 가족들과, 해직 교수, 해직 언론인들이 드나들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모의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민주구국 선언문 발표는 민주회복운동을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서명하고 체포 구금되어 사형언도까지 받은 김대중을 비롯한 윤보선, 함석헌, 정일형,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이문영, 이우정, 문동환, 김지하, 함세웅 등, 옥에 갇힌 12명은 전부 기독교 인사들이었다. 물론 유신독재시대 반공과 경제개발을 이유로 박정권을 비호하며 에큐메니칼 진보 진영의 반독재운동을 용공 좌익, 자본주의 붕괴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극우 기독교 세력도 적지 않았고 대부분의 보수 근본주의 교인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1970-80년대 독재정권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진보적 교회와 기독교가 버티며 민주화운동의 보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를 해산하고, 대학의 문을 닫고, 신문기자들을 쫓아내도 교회와 성당, 기독교회관은 폐쇄하지 못한 덕이었다.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해직자들이 모이는 예배 형태로 반독재 저항 모임은 지속될 수 있었고, 명동 성당은 데모하다 쫓기는 학생들의 숨을 곳이 되었다.

이승만 독재 13년, 박정희 독재 18년, 전두환 독재 9년을 합해 87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40여 년 동안은 독재 시대였고, 한국 민주주의는 그 동안 온갖 탄압과 시련, 숨 막히

는 질곡 속에서 자라났다. 기독교의 일부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요 큰 축복이었다.

1987년 6.10 시민 항쟁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실현되고 5공화국 독재를 물리치고 제도적 민주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군부 독재 세력의 양보와 민주화 운동세력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했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1987년은 오랜 군부독재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흔들림 없이 공고화 되는 민주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 체제가 유지된 지난 35년은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대였지만,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내용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아직 너무나 빈약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한 시대였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실현된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였지만 경제 민주화나 민생 복지, 국민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경유착과 권력기관의 비리, 모순은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줄 곳 모든 대통령과 정부, 권력기관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퇴임 후 대통령의 아들이나 친인척이 비리와 부정부패로 구속되어 형벌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 부패가 사람이나 개인이 부도덕해서 라기 보다는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 자체의 제도와 구조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절대 권력의 분할과 통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와 정권교체를 치르는 동안 시민 사회와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고 민주 정치 발전에도 많이 기여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금융 실명제, 군부세력 하나회의 숙청이나, 김대중 정부의 남북 화해와 공존, 국민 의료 복지 등 제도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국정원 개혁이나, 정당투표제,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도입 등은 많은 시민 운동들이 일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세계사적 과정을 보면 프랑스 시민혁명이 전형적 모델이겠지만, 국민들이 정치 질서와 통치자를 선택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우선 달성해야 하고, 그 후에 국민들의 의식

주 생활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민주화를 목표로 추구하며, 점차 직업교육, 여성, 장애인,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회의 민주화로 발전 하는 것이 대체로 보편적 과정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없이 경제 사회적 민주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면 87년 이후 오늘까지 기독교가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업적을 냈다고 볼 수 있을까? 쉽게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갔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서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물러섰고, 이슈나 정책별로 대응하는 방식의 참여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인사들이 정당과 국회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했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교회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 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기독교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는 따로 조사연구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인권문제나 평화문제, 환경 노동문제, 복지, 교육, 여성문제 등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성명서를 내거나 교육 계몽 역할로써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에 교회협의회(KNCC)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 평화 통일운동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큰 일 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나 접촉이 범죄가 되고, 평화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철저히 금지되던 시절에 88 교회선언을 통해 과감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WCC 등 해외 에큐메니칼 기관들과 협력해 북한교회와의 방문, 교류, 접촉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요 업적이었다.

88년 2월의 선언 발표 후 대학캠퍼스와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해 7월에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발표해 통일 논의의 자유화와 북한과의 교류, 접촉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 91년 남북 합의서의 골간을 제시했으며 햇볕 정책의 토대를 닦는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88선언에 실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신뢰가 형성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전시 작전권은 반환해야한다.”는 구절 때문에 보수 교단과 교회들이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한기총을 만들어 교회협과 대립하는 보수진영을 탄생케 했다. 이로부터 한국 기독교의 보수 진보의 진영 간 대립과 논쟁이 가열되었고, 정치적 갈등과 투쟁도 심화되었다.

교회협과 한기총을 둘러싼 기독교의 분열과 난맥상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사회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태도에도 좌와 우, 극좌와 극우로 나뉘어 보수 기독교는 보수 우익 정당을 밀고 진보 기독교는 진보 좌익정당을 밀는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한기총이나 좌우 기독교 기관들 내부에서의 파벌과 계파 대립은 신학적 노선이나 이념이 아닌, 이권과 인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 서로 비난과 욕설, 싸움과 재판으로 추태를 부리다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선거 때마다 반공사상과 친미자본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보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사이비 기독교 정치꾼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보수 반동으로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장로대통령 만들거나 누가 누구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그런 것이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립학교법 반대, 국가보안법지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반민주적 정치행위를 일삼는 기독교 정치꾼들을 건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 이론을 펴서 고립시키고 기독교 대중을 계몽하는 과업이 시급한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기독교가 민주화와 사회발전을 위해 바른 역할을 하자면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한국 민주화의 발전과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강구한 뒤, 적합한 때와 방법을 찾아 참여활동을 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독일처럼 정치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기독교적인 대책과 참여방식을 강구하는 상설 기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그러면 1987년 체제의 민주주의를 35년간 겪어 보면서, 특히 실패의 경험들을 반성하면서 고려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상과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1) 정치적 민주화의 과제

먼저 87년 체제 하에서의 3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고,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나 금권 선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민주주의는 공고해 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에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진 것은 87년 이래 유지되어

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모색 하자는 시대적 요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 하는 국민이 여론 조사에서 75%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 개인의 무능과 부패도 문제지만 이를 견제해야할 국회와 정당의 무기력, 검찰과 언론, 감시기관의 무능이 더 문제인데 결국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핵심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통령이 공천권, 정치 자금,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여당을 장악하고 있고, 인사권을 통해 검찰,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 권력 기관을 통제하며 심지어 언론, 교육, 문화 등 사회 권력까지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혼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개편에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프랑스 형의 이원 정부제, 독일, 영국과 같은 의원 내각제, 오스트리아의 직선 대통령과 의회제의 결합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들이 있다. 모든 제도와 모델에서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와 모델을 한국 정치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정치권에서 합의된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 1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은 보다 분권화된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총리와 내각과 권한을 나누고 수직적으로는 지방 정부와 권한을 나누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 된다. 개헌을 위한 왕도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며 변화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아가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나 비리를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국회와 정당의 무능에 있다. 해결책은 정당과 선거의 개혁을 통해 대의 민주 정치를 정상화하는데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일상과 무관한 조직으로 정체성도 애매하고, 정치적 연속성도 상실해 선거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선거 캠프 정도의 조직으로 실패한 정당일 뿐이다. 이렇게 정당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데는 정당을 국민의 뜻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공적 기구가 아니라 집권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선거용 도구로 만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정당 민주화를 억제하고, 당원들을 소외시킨 정당법과 정당 운영에 더 근본적 원인이 있다.

정당이 선거용 일시 정당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천해가는 일상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당을 부활 시켜야 하며, 상시적인 정규 당원들이 있는 지구당을 통해, 각 지역에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당 활동이 일어나도록 정당의 조직과 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원 조직의 재정비,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공천과정의 제도화, 중앙 지도부의 민주적 선출, 정당 지도부의 활동 기한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등 정당 민주화가 필수적 과제이다.

의회 내에 들어간 정당들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국고 보조금을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원이나 싱크 탱크에 활용해야 한다. 공약 실천과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행정부처나 국회 상임 위원회와 상시적 교류와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87년 체제하에서 구성된 정당의 현황은 지역 주의적 선거를 통해 득세한 거대 양당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이나 활동을 막는 카르텔적 양당제 일 뿐이다.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이슈와 실천 목표를 가진 군소 정당들의 출현은 매우 어렵고, 지역 주의적 소선거구제가 의회 진출을 막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 개혁과 함께 선거법의 개혁, 선거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정당과 의회가 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운동과 캠페인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선거법이 개선되어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의 과제는 행정부의 독주와 폐해를 개혁하는데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를 확대해야 한다. 87년 헌정체제는 제도적으로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불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직선제 대통령제’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보수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로 이루어진 87 헌정체제는 ‘보수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 시키지 못했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광범위한 인사권과 관리 감독 기구를 통해 행정 관료를 통제했던 대통령의 권한마저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른 관료 주도의 정치와 또한 폐해가 발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작은 정부를 위한 행정개혁을 시도했으나 정권 말기에 이르면 그 목표는 상실되고 어김없이 관료 조직이 확대되어 갔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관할권 논쟁이나 책임전가는 다반사였으며, ‘관피아’, ‘모피아’와 같은 부처 이기주의와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드러나곤 했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가 행정 개혁의 필수적 요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의 증대나 공무원의 교육과 자질 향상 등의 방안도 심각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하며 기능을 다하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입법부인 국회이다. 내각 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과 선출된 의원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민의가 전달되는 곳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대단히 낮으며,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입법 행위,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국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입법 활동, 지역사업 유치활동, 민원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재선에 관심이 많은 한국 국회의원의 경우 비가시적인 입법 활동보다는 가시적인 지역구 선심 사업 유치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 지도부를 위한 활동을 통해 재선의 목표를 달성하려하기 때문에 국회 본연의 사명인 입법 활동이나 행정부 감시 활동에는 소홀하다. 이렇게 파행적인 국회의 모습은 잘못된 정당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에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주의와 할거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공천권을 잡기 위한 당내 계파간의 갈등이 심각하며,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계파별 경쟁과 싸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 한국 국회와 정당의 특징인 잦은 분당과 창당, 정당 명칭의 개명은 바로 정당과 국회가 당파와 계파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려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 할거주의에 따라 여야의 공천권이 정당의 보스에 의해 독점되고 전횡되는 비민주적 의회와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세력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를 통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함으로 다양한 민의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창당을 어렵게 하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해서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해야 한다. 지배적인 양당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도, 교섭단체를 규정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3백 명 이상으로 늘려서라도 최소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고 대선 양원제를 실시해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양원제의 설치에 지방 분권의 촉진,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역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 정책 결정 구조를 분권화하고 전문화해야 하며 정당 지도부에 의한 국회운영 방식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분한 공청회와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상시 국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각성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있다는 것은 만고의 불변하는 진리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 70년을 살펴보다도 4.19, 10.26, 5.18, 6.29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출하고 새롭게 혁신한 동력은 국민들의 저항운동과 선거 등을 통한 정치 참여에 있었다. 부정부패와 타락한 권력층, 권위주의 정부에 항거한 시민회의 정치참여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왔고 공고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는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였다.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외면, 혹은 왜곡하거나 특정의사만 대표되는 현상이 만연할 때,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정부가 공공선이나 공약을 실현하지 못 했을 때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선거와 같은 관례적 정치 참여 보다 시위나 집단행동 같은 비 관례적 정치 참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보편적 사례이다. 특히 최근 한국 민주화의 과정에서 비 관례적 정치 참여가 고조된 때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정치 참여는 독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저항운동이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운동으로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강도와 지속성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며 테러나 게릴라전과 같은 무장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이라 하겠다.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며, 학생의 주도성은 약화되었다.

2) 경제적 민주화의 과제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1997년 IMF 사태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져 분배와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세계은행’이 1993년에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나라로 소개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소득 불평등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 불평등에서 뿐 아니라, 산업간, 기업 간, 계층 간, 지역 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노동자 사이에도 양극화 문제는 심각해져 정규직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만 비정규직은 차별에 시달리며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자 전체의 1/3 수준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실상은 절반에 가깝다고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60% 정도가 한시적 노동자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제 한국은 근거 없는 성장지상주의를 반성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에 이르지만 복지 지출 수준은 다른 나라 1만 달러 시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복지 예산이 50-60%이며 경제 예산이 10% 내외인데,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분배, 복지를 무시한 한국은 반대로 복지예산이 10%대에 머물다가 참여정부에 와서야 초기엔 20%, 말기엔 28%로 상승했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성장 만능주의, 성장 지상주의가 지배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복지 정책의 무시 내지 빈곤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복지국가로 평가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공공 부문의 일자리 수가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며,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의 출산파업과 노인 자살률 최고라는 심각한 모순을 낳고 있다. 이제는 낮은 복지 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을 살려서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해야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가 소유나 소득의 불평등 구조의 개선과 점차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극복에 있다면, 복지와 분배의 확대와 함께 재벌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방안에 대해서는 일치된 이론과 견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막대한 공헌과 영향을 끼친 재벌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고용의 능력을 살리면서,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소득과 위상을 높이는 상생의 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와 개혁의 핵심이 불평등과 차별, 양극화의 극복에 있다면 재벌 개혁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의 개혁이 필수적 과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향상키 위해 경제 분배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노동 삼권과 조합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의 과제와 전략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천만 노동자의 형편과 조건들은 다양하고,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 내부의 차별과 갈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현황과 조건의 분석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기 쉽다.

노동 문제의 오랜 연구자 김유선은 87년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인상되고 노동 시간은 단축되어 삶의 질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도 개선되어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가 건설되는 성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파고와 함께 97년 외환위기가 닥친 후 시장 근본주의, 성장 제일주의가 지배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동자의 삶은 피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청 업체와 비정규직의 급증, 고용의 질 하락, 청년실업, 헬조선 등으로 노동의 위기가 도래했다. 통계적으로 실증되는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임금상승 없는 성장, 노동자의 소득 분배율 하락, 임금 불평등 확대, 11%에 멈춘 노조 조직률 등은 노동자 소외 현상과 위기를 잘 보여 준다.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에 대해 그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의 조직화, 산별노조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노동자의 9%가 미조직된 상태에서 노동 인권을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노동자와 기업가, 정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 내용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과 함께 경제적 의사 결정과 소유 구조의 민주화에 있다고 본다면 기업 경영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민주화의 과제

정치적 민주화의 열매는 당연히 경제에서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잇따라 열리게 마련이다. 국민들 전체가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사회적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데서도 진전을 보게 되는 것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나타난 보편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를 동시에 골고루 진행 시키는 것은 아니다. 교육, 문화, 언론, 건강, 환경,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중적 각성과 요구와 함께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주적 권리와 혜택은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야별 시민운동의 발전 여하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권력에서 독립된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 곧 시민 사회의 성립이 없이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통치 권력에 복종하는 국민들만 있으면 군주국가나 봉건 국가이지 민주 국가일 수 없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학생과 지식인들의 항거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역사가 있었지만 (4.19와 10.26)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다시금 군부 독재로 넘어가게 된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성숙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1987년의 민주화는 사실상 시민 대중들이 참여한 6월 항쟁의 승리로 이루어진 성과였고 이때로부터 한국의 시민사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사회학자 이시재는 87년 민주 체제 이후에 급격히 성장한 시민운동의 양상과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들을 일별하면서 2천 년대 이후의 분열과 위축 현상과 함께, 인터넷, SNS 등 정보 통신혁명과 시민운동의 발전 양상을 분석, 전망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얻어낸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뿐 아니라 기본 인권의 신장, 자유 언론의 보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실시, 정당 활동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서 곧 바로 억눌렸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되었고, 파업과 조직 운동이 일어났다. 노동조합의 결성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연합, 빈민연합, 환경운동 연합, 경실련, 참여 연대, 민변, 한겨레신문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운동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2천 년대까지 전국엔 2만여 개의 각종 시민단체와 지방 민간 조직들이 생겨나 시민사회는 크게 성장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비정부, 비영리, 자발성, 공익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시민 사회 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이익집단, 관변단체, 직능단체, 문화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지만, 노동, 농민, 여성, 언론, 환경, 빈민, 사회 각 분야에서 민권을 신장시키고, 차별철폐와 권익옹호를 위한 시민 사회 단체(CSO)들의 활약과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2천 년대 이후엔 시민 사회 운동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금융위기와 세계화의 불안, 신자유주의 범람으로 빈부 격차가 양극화하며 시민 운동권에도 이념적, 정치적 불화가 일어나고, 관변 측 운동과의 좌우 대립도 생기게 되었다. 총선 전략에서의 대립,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차별, 회원 수와 회비의 감퇴 등으로 자생력과 조직력에 따라 시민운동 단체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와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인터넷 보급 등으로 시민 단체를 매개로 하지 않는 비조직 시민운동과 개인화가 확산되어 시민운동의 형태와 방법은 극히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2017년의 촛불 시민 광장에 나타난 시민 사회 운동은 이제까지의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가운데 새로운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인터넷과 SNS 등 무선통신 기술과 정보화가 초 연결(Hyper-connectivity)을 가능케 한 상태에서 동원과 소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방식을 활용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시민 대중을 광장이라는 도시공간에 모이게 하고, 광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러한 광장과 소통혁명의 경험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조직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규범과 목적을 공유하는 새로운 퍼블릭(Public)을 등장시키며, 유동사회(Liquid Society)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한다고 이시재는 주장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매개로서도 유연한 시민단체와 유동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1987년 민주 체제가 수립 된 후 오늘까지 30여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괄목할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아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차별, 불평등, 부

자유 등 모순된 현실은 널려 있고, 많은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안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험난한 고개와 어려운 과제는 너무나 높이 쌓여있다.

[논찬1]

공략할 것인가, 낙후시킬 것인가

양승훈(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종국 이사장의 안타까운 글을 읽었다. 2022년 현 시점에서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되고 계도화되었다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특별한 설문조사나 좌담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름이 넘치던 기도회와 부흥회, 노방전도의 자리에 응하는 것은 이제 노인들과 극소수 청장년 뿐이다. 분명 산업선교를 통해 무학의 노동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임을 알려주었던 개척 교회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성을 지르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격다짐을 하면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도 계몽의 밝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유사과학을 무기로 자연과학과의 논의의 문을 열려는 부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구도 교회를 진지한 ‘등불’은 커녕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성’ 문제까지 밝혀본 것은 내부의 자성을 위한 극약처방 같다. 대한민국의 일반인 63.7%가 동성애자를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일 때, 목회자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회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아예 인정하지도 않는 의견을 보인다. 이미 성공회를 비롯 기독교의 교파들이 소수자를 민주 시민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성원으로셔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이 개신교의 다수파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예화를 현실에서 구현해줄 누군가를 찾고 혐오하고 있는 셈이다.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먼저 백종국은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국가주의 우상숭배’와 ‘맹목적인 반공주의’라는 축적된 개신교 주류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새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올바른 영성을 일깨우고, 의인됨-무죄선언됨의 독선이 만드는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전한다. 셋째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모습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그리고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인 사회에서 신앙과 지성의 수준을 높이고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전한다. ‘3대 정치적 교양’인 무죄추정의 원칙, 이익의 충돌, 차선의 선택을 우리 처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전한다. 달리 말하

면 한국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그리고 본을 보여야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지점에서 신학도가 아닌 사회과학도로서 논평하고 싶은 주장은 하나다.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은 개신교와 사회의 모순을 ‘공략’할 것인가, ‘낙후’시킬 것인가? 사회학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다룰 때 최근 10년 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종족주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단 안을 스스로 게토로 만들고, 정서적 고양을 취할 지언정 다른 생각과의 교류 자체를 끊어 버린다. 새도우 복싱처럼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좌표’를 찍고 맹비난을 하지만 실제로 가상의 적과 실제로 조우하려 하지 않는다. 토론 대신 비난과 혐오를 퍼부을 뿐이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알고리즘은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나 ‘에코 챔버(echo chamber)’ 등의 기술적 설정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의 주장글이나 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배제시킨다. 서로는 ‘가짜 뉴스(fake news)’라면서 가상의 다른 정파를 공격하지만 실은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알고리즘과 사람들의 행태 모두 군집화를 고양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2030 MZ 세대 청년들은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자신들의 성곽을 세우고 해자를 파고 대화 대신 가상전투만을 계속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정치적 선택으로도 연결되며 바람이 불 때마다 마다 정치적 스캔들과 신드롬을 창출한다. 브렉시트 찬성, 트럼프 당선, 그리고 2021~2022년 한국의 정치적 사정 모두 그러한 신드롬을 반영한다.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진보나 극단적인 보수층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는 ‘중위수렴 테제’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양극화 테제’가 더 힘을 받는 형국이다. 게토, 양극화, 종족주의의 시대가 펼쳐진 셈이다.

개신교의 자정을 바라는, 한국 개신교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강건하게 만들려는 개혁자들은 어떠한 입장에 서야 하는가? ‘국가주의 우상숭배’와 ‘맹목적인 반공주의’, 그리고 청년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낙후’시켜버릴 것인가? 선진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외피를 둘러싸고, 어차피 옳으니 옳을 것이며 이길 것이라는 방식으로 ‘낙후’되기만을 기다려 왔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면 대안적이며 좀 더 우월한 입장에 서 있는 ‘운동’의 관점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했던 것은 아닐까? 다원주의와 진보적 엘리티즘의 모호한 전략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 사이에 숙주와 같은 사이비 종파가 판을 치고, 반공주의 운동은 광화문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그 사이에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라면 구태여 할 필요

있겠는가”라는 개혁파의 생각이 역설적으로 중간지대 자체를 형해화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토론자는 ‘우리의 옳음’을 너무 굳건하게 믿는 나머지 저 쪽의 낙후를 기다리는 생각보다는 공략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논찬2]

한국 민주화의 발전과제 관련 논찬문

조성실(시사평론가,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1.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신교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대표성을 갖는 단체로는 단연 크리스찬아카데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도시산업선교회 등 개신교 내 소수의 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거점으로서 역할 하였고, 기독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독재 정권 타도라는 거대약 체결과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이 공통의 주제였던 시대 속에서, 각계 지도자 양성, 민주 인사 구명을 위한 활동과 기도회 등 냉혹한 시대를 견디며 이어져 온 사역들은 1987년도 개헌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본 논찬문은 본고에 자세히 기술된 과제들 이외에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87개헌 이후 민주화 투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다소 약화되면서 개신교계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시민운동 및 문화 사역 측면에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 민주화 운동 그룹 인사들의 제도권 정치 진입도 이어졌다. 한편 개신교계 내 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지도자 그룹 역시 과대표성을 갖고 현실정치에 참여하며 정치세력화의 한 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동시에 다원화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각계 시민이 판단해야 할 정치적 의제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고,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넘어 매 순간 진위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겹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거대 담론에 대한 개신교계의 입장이 표명되었던 시대를 지나, ‘각 개신교인들’이 매 순간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2. 추가적 과제

그런 점에서 ‘반민주적 정치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동치시키며 성도들의 정치세력화에 앞장서는 교계 지도자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의 정치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위한 개신교적 대책과 참여 방식을 강구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문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민주시민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조직의 시급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적인 두 단체가 모여 함께 대화를 이어가는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역사적 경험과, 복음주의 진영의 영성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 잡힌 교육의 장을 마련할 때, 신앙인이자 건강한 시민으로 공존하고자 씨름하는 이 시대의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통찰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적 신앙고백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교계 지도자들을 통한 말씀 적용과 학습에 익숙하며 이러한 성향은 정치사회적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복음의 유일성이 익숙한 신앙인들의 사고방식과 교계 내 위계적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이 다수인만큼, 개신교인에게 민주주의는 때때로 난해하고도 모순적인 난제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팔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겨온 교회 내 문화도 자리하고 있다. 본고에 상술된 것처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개신교계의 대외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신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주시민이자 하나님나라의 성도로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일에 두 단체가 힘을 모아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이후(특히 70년대 이후) 개신교계 내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고학력 개신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 선교, 노동운동, 빈민운동은 그 자체가 민주화 운동으로서 기능하며 여러 법제도적 변화의 촉매로 역할해 왔다.

그러나 민주 정권 수립 이후 수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법률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어 아쉬움을 자아낸다. 2017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이외에는 실질적 추진은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그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 과제를 비롯하여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편, 경제적 민주화 실현을 위한 과제 등 정치·경제·사회적 민주화를 위한 개신교계의 역할과 과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개신교계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 할 법제도적 과제 역시 적지 않고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신교계의 꾸준한 노력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는 국회를 비롯해 ‘제도권 정치를 통해야만’ 사실상의 구현이 가능한 법제도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도주의적 노력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바로 지난한 과정과 시행착오, 제도의 악용 가능성 등이 그 예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공은 제도적 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설계의 일차적 목적이라면, 민주주의의 완성은 민주시민의 출현과 양성을 통해 마침내 구현된다. 역설적으로, 민주시민이 결여된 제도적 민주주의는 자칫 인권 및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합리적이고도 설득적인 장치로 악용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법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개신교인들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철학 도서 읽기 모임, 민주적 정관의 도입과 실천, 교회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은 이를 위한 효과적 교육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개신교적 세계관과 민주시민소양을 내재한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도 함께 해낼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지지로 이어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개인의 선한 의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쉽게 변질된다. 교계 또는 교회 내 정치의견그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동원되거나 자칫 세속적인 정치세력화 그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시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역시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가진 이들이 개신교 신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상호간 생각의 차이와 합의점을 나누어 간다면 이 또한 민주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88만원 세대론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논찬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진보 진영은 88만원 세대론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사회참여적인 태도와 신앙적 고백의 균형을 갖춘 개신교인이라면 88만원 세대론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할까? 88만원 세대에 담겨있는 시대적 모순을 즉시하고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만원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아닐까? 이와 관련해 강연자는 그 삶을 가능하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릎을 치게 만든 통찰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핵심가치로 삼는 교계의 실험들에 주목하게 된다. 경제적 민주화를 향한 개신교계의 가장 강력한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희년은행을 비롯한 개신교계 내 경제 관련 실천 운동들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과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해가는 개신교도(교회)들의 삶이 우리 사회 내 경제적 민주화 발전에도 긍정적 자극제로 견인적 역할을 해나가기 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끝—